

에너지동향

OECD 국가의 에너지가격 흐름

86년 유가 대폭락 이후부터 88년 까지 석유의 실질 도입가격(자국통화 표시) 하락은 명목 도입가격(달러 표시)의 하락폭을 능가하고 있다. 이는 달러가치의 하락효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의 소비국의 석유 도입가격(자국통화 표시)은 하락하게 된다. 예컨대 달러가치는 85년 224.05엔에서 88년 128.15엔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면 실질 도입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된다.

석유수입가격의 하락이 곧바로 소비국의 국내 소비자 다시 말하여 최종 수요자가 가격에 전부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 대상기간 중 유가가 최저를 기록하였던 86년 3/4분기의 경우 실질가격기준으로 석유 소비자 가격은 도입가격의 44% 정도의 반영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 가격의 유가 하락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비국의 세제 변경, 정제(유통)비용 등의 변화로 하락폭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석유 소비자 가격과 경쟁연료 가격과의 가격지수 SPREAD는 유가 급락시 확대되고 유가 상승시 축소되어 왔다. 경쟁연료 가격은 유가 급락 직후(86년 1/4~3/4분기 중) 석유 소비자 가격의 상대적인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같은 상대적 가격

차이는 86년 3/4분기 이후 유가가 다시 상승함에 따라 축소되기 시작하여 87년 3/4분기에 이르러 85년 수준으로 복귀되었다. 그러나 석유 도입가격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지수 SPREAD는 88년 중 다시 확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유가의 급락이 대체에 의한 석유 share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 소비자 가격과 대체 에너지 가격과의 상대적인 격차가 확대되기는 하나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통상적인 상대가격 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유가 누렸던 일시적인 경쟁우위는 약간의 유가 상승에 의해 즉시 소멸되고 만다. 따라서 일시적인 석유 share 확대는 발생하게 되나 장기적인 소비 대체 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시적인 가격효과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는 다중연료 연소 시스템을 제조업 연소설비에 적용, 에너지원간의 가격차에 따라 연료를 선택·전환함으로써 비용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이라크, 원유 수출능력 확대로 OPEC내 발언 강화할 듯

금년 9월경 IPSA-II 파이프라인(수송능력: 165만 b/d) 준공을 비롯, 이라크의 원유 수출 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라크

본고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분석한 자료를 전재한 것이다.

는 현재 350~450만b/d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능력부족으로 증산에 제약을 받아 왔었다. 이라크는 수출능력확대를 계기로 OPEC쿼터 중에서 더 많은 자국몹을 요구하거나, 또는 쿼터위반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는 이란을 비롯한 전회원국의 협정위반으로 파급될 수 있어 OPEC쿼터체제는 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라크의 생산능력은 350~400만b/d(국제에너지동향 분석, 1989.1), 또는 최대 450만b/d(이라크측 주장)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능력은 250만b/d내로 제약을 받아 왔다.

현재 이라크의 수출능력은 ① 터어키경유 파이프라인 160만b/d, ② 사우디경유 파이프라인(IPSA-I) 50만b/d, ③ 공로 수송(요르단, 터어키경유) 30만b/d, ④ 페만 수출5~10만b/d 등을 합해 모두 245~250만b/d이다.

이라크의 국내 원유소비는 30만b/d내외이다. 내수분과 수출능력을 합한 275~280만b/d가 이라크의 최대 생산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과거 15개월간의 이라크 원유생산실적은 260~270만b/d로서 상기 최고치에 근접한 일장수준을 지속해 왔었다.

이라크의 수출능력은 금년 9월의 IPSA-II 파이프라인 준공에 뒤이어 페르시아만 수출이 재개됨으로써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2배 이상인 600만b/d 수

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IPSA-II 파이프라인은 사우디를 경유, 홍해의 안부항까지 연결되며 수송능력은 165만b/d이다. 수송능력 50만b/d인 현재의 IPSA-I 파이프라인은 가동을 정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이후 페르시아만의 수출능력이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금년말~내년초에 걸쳐 적어도 240만b/d의 페만 수출능력(AI-Bakr 160만b/d, Khor Al-Amaya 80만b/d)이 확보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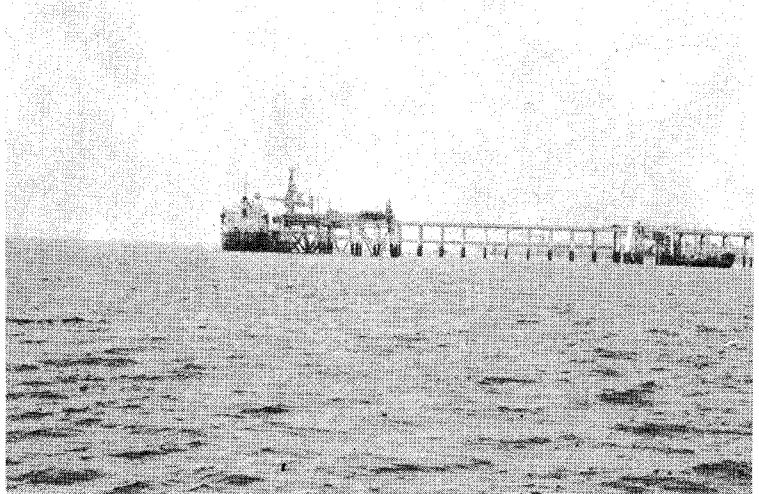
수출능력 확대를 계기로 이라크는 OPEC내에서의 위치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금년들어 쿼터(264만b/d)를 충실히 지켜 왔고, 지난 85차 총회에서는 OPEC의 하반기쿼터 상향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는데, 그 배경은 수출능력상 제약이 가장 큰 이유였

다. OPEC의 분위기, 이라크의 국내사정등을 감안할 때 이라크는 증산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UAE의 상승적 쿼터위반, 쿠웨이트의 쿼터몹 확대요구, 베네주엘라의 독자적 콘덴세이트 분류기준 적용 등 회원국의 국내사정을 이유로 한 OPEC의 규율위반이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는 종전 이후 경제부흥을 위해 석유수입확대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시장 점유율 내지 판매물량확대를 위한 증산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라크의 쿼터증대요구 또는 위반은 이란을 비롯한 타 회원국에 파급됨으로써 쿼터문제는 OPEC의 끊임없는 쟁점이 될 것이다. OPEC은 9월에 감시위원회를 소집하여 쿼터조정, 나아가서 항구적인 쿼터몹을 강구할 예정이나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



「표면상 합의·어느 정도의 쿼터 위반목인」이라는 현 상황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알제리산 LNG 발 전용 도입협상 타결

6월 22일 벨기에와 알제리간 LNG도입협상은 최소선적물량을 축소조정 (50억 M³/년 → 45억 M³/년)하고 알제리측의 가격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선에서 최종 타결되었다. 벨기에에는 이번에 체결된 도입물량중 연 30억 M³를 초과하는 물량은 발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벨기에에는 서유럽지역에서 LNG를 이용한 가스복합발전분야의 선발국이기도 하다. 현재 발전용 LNG의 불리한 가격조건은 2년후 (1991. 5)로 예정된 가격재조정 협상시 인하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벨기에 Distrigaz사와 알제리 Sonatrach사간에 체결된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최소선적 물량은 1989~90년중 36.5억 M³ 1990~91년중 38억 M³ 1991~92년중 40억 M³ 그 이후는 연 45억 M³이다. 가격조건은 금년초에 체결된 프랑스 GdF사, 스페인 Enagas사와 같은 조건인 중동·아프리카산 8개 원유의 Netback가격 연동 방식이다.

1987년 이후 계속되어 왔던 양사간 교역협상의 최대 장애요인은 최소선적물량 조건으로서 벨기에측은 30억 M³/년을 주장

해 온 반면, 알제리측은 50억 M³/년을 주장해 왔다. 협상타결의 돌파구는 Distrigaz사가 국내의 대규모 전력회사 (Intercom, Unerg, Ebes, SPE)를 설득하였고, 지난 6월초 양국 관계각료가 OPEC총회 개최지 비엔나에서 가진 비공식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발전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는 LNG는 연간 5억 M³나 1992년 이후 20억 M³ 증가할 전망이다. 벨기에에는 원전설비 비중이 67%로 OECD국가중 프랑스 다음의 원전국가이나 가스 발전 설비는 불과 5% 미만이다. 벨기에 정부는 원전반대의 국민여론으로 원전 추가건설을 포기하고, 1992년까지 300 MW규모의 복합가스발전소 2~3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Distrigaz사는 발전용 LNG의 경우, 타 발전연료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개선해 주도록 알제리측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Sonatrach사측이 GdF사 및 Enagas사와 동일한 가격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발전부문에서는 석탄은 물론 파이프라인가스와의 가격경쟁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제리의 LNG수출가격 산정 방식은, 바스켓유가가 \$7.80/B 이하의 경우 LNG가격은 \$1.30/M.Btu로 고정시키고, 바스켓유가가 \$27.30/B 이상의 경우 연동률을 낮게 적용시키며, 그 사이에서는 비례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연동제 적용가격은 선

적기점 이전 2분기 평균 바스켓 가격을 적용한다.

현재의 가격조건하에서 LNG 공급비용은 0.9C/Kwh로 추산되며, 네덜란드, 소련,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공급되는 파이프라인 가스공급의 0.7C/Kwh에 비하여 약 28.5% 비싼 것으로 평가된다. (수송비 및 재가스화 비용 포함). 한편 알제리산 f.o.b. LNG수출가격은 \$2.08/M.Btu로 파이프라인가스 수출국의 평균 f.o.b.수출가격인 \$1.77/M.Btu보다 약 22% 비싼 수준으로 추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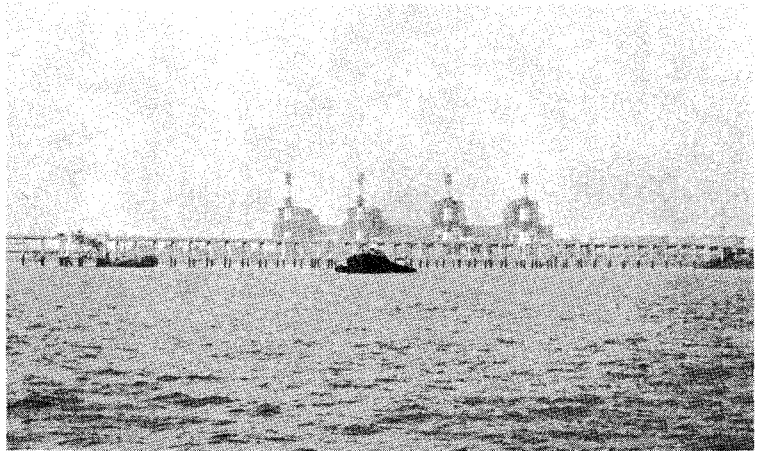
Distrigaz사가 1991년 5월로 예정된 가격조정 협상에서 가격 인하가 가능하리라고 보는 근거는, 나이지리아산 LNG와 노르웨이 Troll가스가 1991년 이후 유럽시장에 등장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 경우 유럽시장에서 Troll가스 공급가격이 천연가스의 가격 가이드라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산 LNG의 서유럽시장 공급은 알제리 LNG가격정책의 견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PEC 쿼터제도의 허실

지난 85차 정기총회 이후 OPEC쿼터제도가 큰 진통을 겪고 있다. UAE가 상습적으로 쿼터를 위반해 오고 있는데다가 쿠웨이트는 쿼터배분방식에 반발하여 자국의 생산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이라크, 이란 등 타 회원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 OPEC 원유생산실적은 20,500만b/d로 추정되며, 이는 18,500만b/d로 설정되어 있는 쿼터를 2000만b/d나 초과하는 물량이다. 쿼터초과생산량중 85%가 페만 산유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UAE(6800만b/d)·쿠웨이트(4100만b/d)·사우디(3000만b/d) 3개국의 초과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3년 3월부터 쿼터제도가 도입된 이래, 쿼터변경문제는 OPEC의 끊임없는 난제로 되어 있다. OPEC이 신규쿼터를 설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생산능력 비율에 따른 배분, ② 기존 쿼터비율에 따른 배분, ③ 쿼터초과생산능력을 감안한 조정배분 등의 3가지가 가능하다(The Energy Journal Vol8, No.1). 그러나 회원국 간의 생산능력에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생산능력 자체의 객관적 평가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①, ③항의 방법은 현실적인 적용상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OPEC의 쿼터배분방법은 일사불란하고 명백한 방법인 ②항의 방법(쿼터비율배분)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이 경우, 생산능력(특히 과잉생산능력)이 큰 회원국의 불만은 상존하게 되어 OPEC의 합의쿼터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OPEC회원국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생산능력이 큰 페만 산유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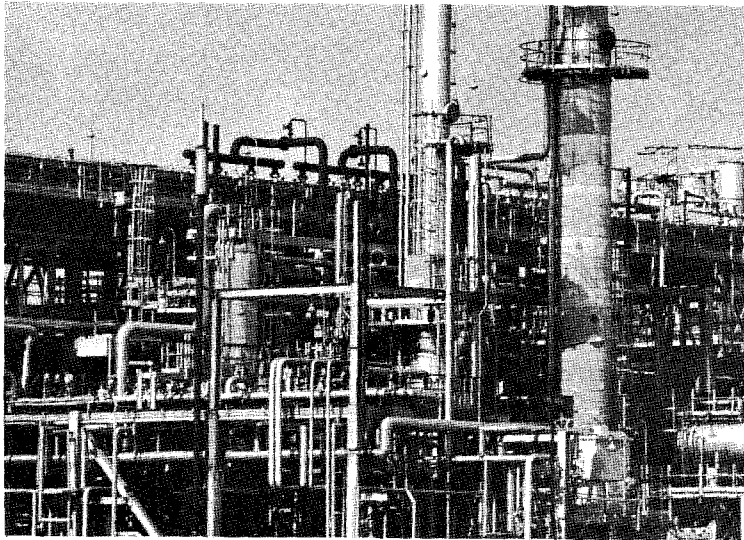


과 그렇지 않은 기타 산유국으로 대별된다. 후자의 경우 현재의 생산가동율(생산/생산능력)이 80%를 넘어서고 있고 생산능력 확대여지도 크지 않아 쿼터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초과생산이 작은 편이다. 반면, 페만 산유국의 현재 가동율은 67~72%에 지나지 않고 회원국 사이의 일력도 계속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쿼터 초과생산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83년 3월의 최초쿼터와 비교해 볼 때 이라크의 현행쿼터비율이 2배로 커진데 반해 UAE·쿠웨이트·사우디의 그것은 축소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OPEC은 쿼터배분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표준공식을 강구중에 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그 타결가능성은 희박하다. '86~'87년에 걸쳐서 OPEC은 상기 표준공식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그 결과, 쿼터 산

정기준이 되는 11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다. 이들 변수는 ① 인구 ②국민 1인당 경제·사회활동(GNP, 부채, 수입, 석유생산, 석유소비, 석유수출) ③ 석유생산기반(생산능력, 매장량, 석유수출비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쿼터표준공식 문제는 이번 9월에 개최될 OPEC감시위원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용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이다. 특이사항은 상기 11가지 변수중 각 회원국이 비교적 쉽게 조절가능한 것 두가지(생산능력, 매장량)가 있는데 이들은 주관적 측면이 강한 특징이 있다. '83년 이후 페만 산유국에서 매장량증가와 생산능력확대발표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현재의 쿼터제도가 구속력이 없고 많은 허점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많은 실익도 갖고 있다. OPEC쿼터는 회원국에게 내부적 구심점 또는 가이드라인 역할



을 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간의 결속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석유생산수준을 정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가이드라인은 OPEC내부뿐만 아니라 비OPEC 산유국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며, OPEC의 쿼터수준 정책은 비OPEC 감산 협력과도 큰 연관을 가지게 된다.

또한 소비국의 측면에서도 OPEC의 쿼터수준 및 그 준수여부는 석유시장동향과약에 가장 유효한 지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쿼터설정을 둘러싼 OPEC 행태를 살펴볼 때, 궁극적 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이 완벽한 쿼터제도는 도입될 것 같지 않다. 현재의 불완전한 제도에서 계속적인 보완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쿼터제도하에서도 50~100만b/d의 쿼터위반은 구조적으로 계속될 것 같다. 이

정도의 쿼터위반은 사우디를 비롯한 OPEC 전회원국의 북인가 능력범위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 탄광파업 확산, 석탄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듯

미 동부탄전지대의 Pittston 탄광의 파업이 2개월여 지속됨에 따라 미국석탄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극동아시아지역의 주요수입선들은 대체공급선의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체공급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 남아공의 생산도 부진한 형편이어서 석탄시장에서의 공급압박 가중과 함께 석탄현물시장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ittston탄광을 시발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동부탄전지대의

파업은 1981년 이래 최대규모이다. 이로 인해 원료탄 및 연료탄 수출이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주요탄광회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몇몇 수출회사들은 불가항력조항을 발효시키고 있다. (ICR, 89. 5. 5; TEX REP, 89. 6. 15). 이러한 사태는 석탄현물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톤당 \$4이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현물로 구입가능한 석탄공급물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무역상들이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물량마저 내놓기를 꺼려함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석탄생산자들은 비축물량을 방출, 공급부족물량을 메꾸고 있으나 파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비축물량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석탄시장의 공급부족물량은 하루 100만톤에 달한다.

호주의 석탄비축이 바닥을 보이고 있고 캐나다의 석탄생산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평소 풍부한 석탄공급에 익숙해 있던 석탄구매자들로서는 사태의 급전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Pittston탄의 최대수입선인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의 주요 고객들은 사태의 악화에 대비, 대체공급선을 물색하고 있다. 주요 고객들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은 것은 제철회사이다. 왜냐하면 수출물량의 과반수를 원료탄이 차지하고 있고 공정상 일관성 있는 원료공급이 요구되

기 때문이다. 반면 발전용 연료탄의 경우 어느정도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유럽고객의 경우 금년 가을에 있을 장기계약가격협상을 앞두고 충분한 비축물량확보를 위해 현물시장을 이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대유럽현물시장공급과 대체공급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아공과 콜롬비아, 베네주엘라의 석탄수출가격도 동반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브라질의 Siderbrasa가 구매입찰한 50만톤의 물량이 응찰자가 없이 인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호주와 BHP-Utah가 현물제공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가격교섭에서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원료탄공급선을 파업대발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Alabama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같은 제철회사의 구매정책과 관련, Pittston회사대표가 일본을 방문, 파업으로 인한 수출물량감축과 인도시기지연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진전은 석탄수출국으로서의 미국의 신용도를 재검토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탄광파업이 자주 발생하는 다른 산탄국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공급선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생산자나 소비자, 탄광노동자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해외수요처 특히 대수요처인 일본의 경우 공급선

을 기타 산탄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조 파업이 더욱 확산되고 장기화될 경우 가을로 예정된 대유럽 및 남미 장기공급 계약가격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C, 발전부문의 천연가스 사용제한 규정 폐지 보류

EC는 지난 5월에 개최된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천연가스의 발전연료 사용제한규정 (75/404/EEC)의 폐지결정을 보류하였다. 이는 최근 EC회원국들의 가스화전 확대움직임과 관련, 동규정이 폐지될 경우 가속적인 발전연료의 가스전환을 우려한 프랑스와 서독의 폐지반대 로비활동이 주요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C위원회는 에너지정책의 공동목표달성을 위하여 상기 사용제한규정의 폐지보다는 부분적 수정을 제의하고 있다.

이번 EC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이미 2개의 가스화전 건설을 승인한 영국을 중심으로 벨기에와 덴마크 등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EC환경위원회 측의 전문가들도 천연가스의 발전용 소비규제 폐지론을 적극 옹호하였다. 그러나 원전대국인 프랑스와 석탄발전대국인 서독의 반대로 동 규정의 폐지가 보류됐다.

프랑스와 서독은 동규정이 폐지될 경우, 이는 발전연료로서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비싼 가스

를 채택하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새로이 가스를 발전연료로서 채택하려는 국가들이 대부분 천연가스를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조달할 계획으로 있어 EC의 에너지 공급안정 목표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C의 「발전부문 천연가스 사용 제한규정 (75/404/EEC)」은 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5년에 채택된 것으로 회원국내 발전부문에서의 가스전용발전소 건설을 제한해 왔다. 그 영향으로 발전연료부문에서의 천연가스 비중이 1975년 13.5%에서 작년에는 불과 6.2%로 축소되었다. 이같은 천연가스 소비비중 축소는 상대적으로 원자력 (10.3%→38%)과 석탄 (30.4%→31.3%)의 소비증가를 유도해 왔다.

EC위원회는 현재의 사용제한규정이 수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경제적 또는 환경적이유로써의 신규설비건설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1988년 EC위원회가 전망한 '95년까지의 발전부문 천연가스 소비수준은 1986년 21.91백만 TOE에서 11.4%증가된 24.4%백만 TOE이다. 이는 총 발전연료수요의 약 6%수준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스훈소설비의 확산과 가스실질가격의 하락 등으로 천연가스의 소비가 '95년까지 40백만 TOE, 2005까지 80백만 TOE로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 SPR 확대 방안으로 리스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미의회에서는 전략석유비축 (SPR)증강가속화 방안으로 직접 원유를 구매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의 영향을 극소화시키면서 수출국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미국으로서는 임차료를 지불하고 공급보장을 받는 것이다.

동 아이디어는 아직 초보단계이지만 경제적 효율성에서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쌍방에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추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의회는 금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전략석유비축 (SPR)의 구매기간을 내년 4월 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동 법안에는 토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중 비축량목표와 목표년

도, 비축증강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에너지성 (DOE)에 위탁하는 사항이 포함되었다.

동 법안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1) SPR목표량, 목표년도 및 비축자금조달 문제, 2) 대통령의 비축방출권한에 대한 융통성여부 여부, 3) 석유제품비축의 타당성, 4) 국내공급 중단사고시의 비축물량 방출여부이다.

현재 SPR비축물량은 5.7억 배럴에 달하고 7.5억배럴로 책정되어 있는 비축목표를 2000년 도까지는 10억배럴로 증강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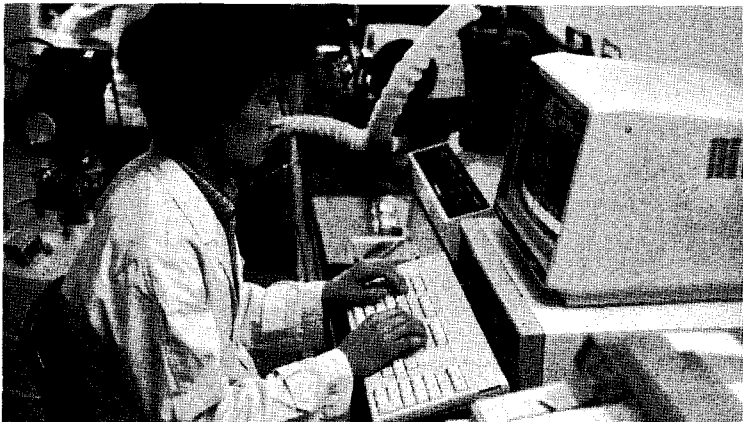
SPR증강에 필요한 획기적인 자금조달방안의 마련과 SPR용 원유의 임차방안은 미의회가 1990년 2월 시한으로 DOE에 의뢰한 연구테마의 하나이다. 중간보고는 올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최근 DOE/EIA의 미국 석유소비 및 생산전망에 의하면 90 일간의 수입중단시 필요한 비축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는 비축증강속도가 적어도 12만 b/d는 되어야 할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현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의 비축속도는 5만 b/d이며 대부분이 멕시코산 원유로 충당되는 것이 특징이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저리 또는 무이자 석유관련 채권 발행, SPR에 대한 옵션선물판매 등이 강구되고 있다.

미정부가 SPR용으로 OPEC 원유를 임차할 경우 미국측은 1)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절감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차료는 구매비용보다는 훨씬 작음), 2) SPR 확대목표를 시장가격상승의 유발없이 달성가능, 3) OPEC저장시설을 SPR저장시설로 대응하기 때문에 수송비 발생없이 SPR증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OPEC측은 1) SPR용으로 원유를 판매하는 OPEC회원국은 OPEC쿼터의 저축을 받지 않고 (SPR용으로 판매된 원유는 비상업용재고로 비상시에만 사용되기 때문임) 2) 잉여생산량비축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미행정부는 SPR증강 노력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OPEC이건 비OPEC이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생산 여력이 없는 회원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공급권을 수입국에 넘겨주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84차 OPEC 총회 (88.11.21~26, 비엔나)에서의 쿼타정의는 생산기준이 아니라 (수출+내수)기준이었다. 따라서 OPEC은 상당량의 쿼타초과 생산량을 자기비축중이다. 상기 비축분이 석유시장에 유입될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유가하락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비축원유를 SPR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시장의 가격하락을 피하고 판매수입을 올릴 수 있다.

산유국이 보유하고 있는 공급여력을 최대소비국인 미국에게 이양하는 것은 향후 석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 정책전환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OPEC회원국은 미국의 비축증가를 적대적인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석유비축은 소비국에게는 공급보장책이 되는 반면 수출국에게는 수요보장을 저해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OPEC회원국별 원유 산 동향

금년 상반기 OPEC 원유생산 실적은 쿼타대비 2050만b/d로 추정된다. 쿼타초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전회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쿠웨이트·UAE·이라크·이란의 생산행태가 향후 OPEC 생산수준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 같다.

알제리, 인도네시아 2개국만이 쿼타이내 생산국이며, 그 이유는 이들 국가의 생산능력이 한

계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Intan유전의 신규 생산을 비롯, 4만b/d의 생산량이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생산량은 쿼터 (130.7b/d) 수준을 밑돌 전망이다.

이란, 이라크 양국은 자국의 생산(또는 수출) 능력범위내에서 최대생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4분기 이란의 생산량이 10만b/d 줄어든 것은 시장점유율 축소, Kharg 수출기지의 운영문제발생에 기인한다. 반면 이라크는 폐만 수출능력확대에 맞추어 매월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리비아는 상반기 경질원유의 수요급증, 가격강세에 힘입어 수입증대를 위한 증산을 추진했다.

회원국의 생산행태는 OPEC 정책에 관한 간접적 의사표시 수단이 될 수 있다. 쿠웨이트·UAE·에라도르·가봉(쿼터배정시 우대조치요구), 베네주엘라(콘덴세이트 분류기준의 완화요구)의 생산량이 6월 총회를 전후하여 급증한 것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3/4분기 OPEC 원유생산은 6월 보다 는 다소 낮은 2050~2100만b/d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웨이트의 생산자제 (135만b/d 이내 생산을 공언), 비수기에 대한 OPEC의 공통적 우려확산 등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9월 회의(감시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쿼터의 재조정이 원활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OPEC의 생산수준은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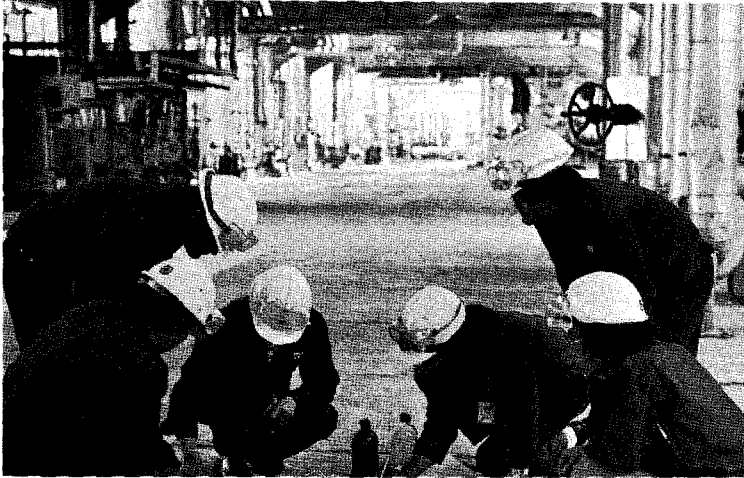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C의 자동차 배출 기준 강화, 유럽 자동차산업 위축 우려

지난 6월 8일부터 부르셀에서 열린 EC환경장관회의는, 1992년 7월 이후 EC지역에서 생산되는 배기용량 140cc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미국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6개월 후인 '93년부터는 1400cc이상의 모든 차종에 대하여서도 동일기준을 적용기로 결정하였다. 이같은 EC의 결정은 소형차 생산비중이 높은 유럽 대륙의 자동차업체 특히 환경개선 노력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남유럽(이태리와 프랑스)의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C의 이같은 환경기준 강화는 최근 실시된 유럽의회선거에서 환경주의자들이 대거 당선된 것과 관련하여 볼 때, 환경문제가 EC의 가장 중요한 우선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C위원회는 이번 자동차 배출기준의 강화가 소형 자동차에 의한 대기환경 오염의 70%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구매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실시로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85년에 결의된 EC의 기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CO 6-11g/Km, HC 1.6-4g/Km, NOX 0.8-1.5g/km였으며 83년 이후 생산 차량부터 적용되어 있다.

EC각국은 이번 조치로 인한 경과사항으로 지금부터 1992년까지 저공해차량 구매자에 대하여 일정 세액(EC기준: 850길더, 미국기준: 1700) 공제원칙을 제도화하였다.

유럽 자동차업계는 EC의 배출기준 강화와 함께 적용시점 이후부터의 이행 의무조항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측은 강화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정기간이 적어도 3년 반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화장치(Catalytic Converters) 부착에 따른 생산비 추가부담이 7-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유럽대륙에서 미국, 일본의 자동차메이커와 경쟁력이 뒤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소비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메이커에 대한 EC시장 확대 기회만을 제공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공해장치의 추가부착에 따른 소비자부담은 약 10% 늘어날 것인데 반하여, 이미 이같은 장치가 부착된 일본 및 미국자동차 구매자에게는 추가부담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차의 생산비중이 높은 이태리 Fiat사, 프랑스의 Peugeot사와 Renault사 등이 EC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시장경쟁력 확보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C-GCC간 자동 무역 협정 추진과정과 전망

EC-GCC간 2단계자동무역협정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블록은 88년 6월 15일 1단계 협정(현 관세 및 무역제도하에서

상호최혜국대우원칙준수)을 이미 체결하였다. 2단계협정은 자유무역특구를 포함, 에너지산업 등 경제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2단계협정추진과 관련하여 EC는 특히 역내에너지 산업에 대한 타격을 우려, 협상에 소극적인 반면 GCC는 조기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EC-GCC협력방안에 대한 최초회담은 85년 10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석유의 안정적 수급 등 양블록간 상호관심사에 대한 협력분야를 제도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양진영은 1단계협정을 체결, GATT정신하에서 경제문류증진 및 향후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기로 했다.

GCC는 88년도의 제9차 정상 회담에서 1단계협력안 승인을 비롯, GCC-EC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유럽석유화학 및 정제산업보호, EC시장에서의 GCC석유화학제품 차별화철폐 등의 현안을 집중 거론한 바 있다.

반면 EC는 GCC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무분별한 침투로 역내석유관련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GCC는 대EC수출에 있어 GSP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EC는 더 이상의 혜택부여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GSP적용품목은 원유, 정제제품 및 제조상품이다.

GCC의 87년 대EC수출량중

95%가 비관세혜택을 받았다. 반면 GCC에 대한 EC의 비관세 혜택은 50%에 불과하였다. 동년 GCC는 관세로 0.5억 ECU를 지불한 반면 EC는 8억 ECU를 지급함으로써 양불록간의 불균형이 매우 컸다.

2단계협력방안은 상호동반자 입장에서 자유무역확대를 포함한 에너지, 농림어업, 과학기술투자, 기술이전 등 산업전반에서 교류증진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원칙은 1) GATT정신 존중, 2) 쌍방간 유치산업보호 보장 3) GCC석유제품의 대EC시장진출에 있어 비차별보장이다.

유럽석유화학협회 (APPE ; Association of European Petrochemical Producers)는 양불록간 자유무역협정을 전면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역내석유화학산업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상유부간의 개방은 하류부문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보호조항도 그 실효성과 특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석유관련연구·투자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상기 협회는 EC-GCC간 쌍무협정이 아닌 GATT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GCC협상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

GIB (Gulf International Bank ; GCC회원국 공동출자은행)는 증대되는 보호무역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92년 EC시장통합에앞서서 양불록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90년대 EC의 대GCC석유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분협정이 양불록간 상호관계를 보다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주장했다.

양불록간의 쌍무무역협정이 발효된다면 세계석유시장개편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큰 것으로 보인다. 양시장간 88년 무역규모는 총 \$240억으로 무역적자는 87년도 \$50억에서 축소, \$40억이었다. 특히, 대EC수출품목중 석유가 80%이상 차지하고 있다. 또한 GCC는 88년 EC시장에 대하여 \$1180억의 자본투자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대서방 투자액 \$3410억중 34%를 점하는 것이다.

일본, OPEC국가와의 다각적 협력방안 강구

90년대 중반경 석유시장에서의 OPEC 영향력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일부 OPEC국가와의 다각적 관계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대상국가로는 매장량과 대외자산보유가 크며, 온건한 가격정책을 선호하는 국가(사우디·쿠웨이트·UAE·카타르)에 중점이 두어질 것 같다.

90년대 중반경 빠르면 '92-'93년경 OPEC의 가격결정력이 커진다는 것은 많은 기관에서 공

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세계은행, 야마니 전사우디석유장관, First Boston사).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안정적 가격의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부 OPEC국가와의 다각적 관계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대OPEC관계에서 특히 중점을 두는 국가는 사우디·쿠웨이트·UAE·카타르의 4개국으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① 이들 국가는 매장량이 풍부하여 원유의 장기 안정공급이 가능하고, ② '88년 현재 이들 4개국의 대외자산보유합계는 \$2861억에 달함으로써 일본(\$2972억)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따라서 일본은 이들 4개국과 채권국으로서의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다는 점, ③ 상기 4개국의 OPEC내 온건파로서 전진적인 가격상승을 선호하고 있어 대량 석유수입국인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상기 4개국이 GCC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일본은 GCC(상기 4개국+오만, 바레인) 블록 자체를 관계강화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관계강화방안으로는 ① 경제협력(원조·직접투자·기술이전·기술훈련), ② 일본시장개방(제품수입확대·일본내투자촉진·하류부문진출), ③ 정치적 공헌(비군사외교·지역분쟁해결기여·경제제재의 적절한 실행), ④ 상호이해 증진(문화 및 학술교류·채권국으로서의 공동보조·석유가 격안정화 노력전개) 등이다.